

“동서고속철 착공·동계올림픽 성공에 강원도 명운 걸렸다”

속초항 항만 조기확충·제2경춘국도 등 5개 SOC사업도 포함
문화올림픽 특별 지원·올림픽 범용 300억원 국비 반영 요청
점경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오색케이볼카 설치사업 강조

도 12개 현안 무엇인가

도는 20일 열린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도·시·군 현안 토론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과 SOC 확충 등 12개의 지역현안을 제시하고 국비 확보 및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8명의 당선자는 이날 건의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를 1번 현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비용·편익(B/C) 조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정처권의 총력지원대세를 요청할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강원도 1번 공약이자 지역균형발전, 유라시아 연결 핵심 교통망 구축이라는 점을 들어 국회 차원의 전폭 지원을 요청했다.

동서고속화철도와 함께 속초항 항만 조기 확충과 동해선 심화·제진 철도 건설, 평택-삼척 고속도로 건설, 제2경춘국도 건설 등 SOC 확충이 5개로 지역 현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관련하여서는 문화올림픽 국비 특별지원과 올림픽 경기장 사후관리 국가 지원,

올림픽 국가정원 유치 등 3개였다.

도는 올해 구상하고 있는 핵심 올림픽 문화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국비 50억원 중 20억원의 조기 지원과 내년도 올림픽 범용을 위한 300억원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또 국가대표 선수훈련 등 동계스포츠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경기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건의했다.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상원의 계류 상태로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점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오색케이볼카 설치사업 국비 지원, 강원관보훈요양원 건립, 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건립 국비 지원 등도 현안에 이름을 올렸다.

최문순 지사는 “가장 긴급한 도 현안은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도민 자존심과 자부심이 걸린 사업이라 결코 물러설 수 없다”며 “8명의 당선자 모두 힘을 합쳐서 최우선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주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강원일보사와 춘천MBC가 공동 주최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도·시·군 현안 토론회가 20일 현관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강원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사무총장 최명환·도지선, 관수협위원장 최문순 지사, 송기현, 이철규, 이양수, 염동원, 김기선 당선자, 김시성 도의장, 김진태 당선자, 이희중 강원일보사장, 최영철 당선자, 송재우 춘천MBC사장, 이면우 강원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 박승선기자 ivano@kwnews.co.kr



◀이희중 강원일보사장이 관수협 당선자에게 축하 꽃다발을 건넬하고 있다. 권태영기자

/ 참석자 명단 /

◇국회의원 당선자

△관성동(강릉)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김진태(춘천) △김기선(원주갑) △염동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송기현(원주을) △이철규(동해-삼척) △이양수(속초-고성-양양) △김정우(경기 군포갑·철원 출신)

◇참석인사 (무순)

△최문순 도지사 △김시성 도의장 △여형규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송재우 춘천MBC사장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 △이면우(춘천교대총장) 강원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 △김중수 한림대 총장 △김현영 강원대 총장 임용1순위 후보자 △원정복 원주시장 △최명희 강릉시장 △김연식 태백시장 △이병선 속초시장 △김양호 삼척시장 △노승락 홍천군수 △박선규 영월군수 △심재국 평창군수 △전정환 정선군수 △최문순 화천군수 △전창범 양구군수 △이순선 인제군수 △윤승근 고성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김기홍 도의원 △유정선 도의원 △맹성규 경제부지사 △전만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황계영 원주지방환경청장 △강순삼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조원규 농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이정용 도개발공사 사장 △김현기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기획총무국장 △김기남 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장 △이재한 도예총회장 △한명옥 도여성단체협의회장 △김영숙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강원도지회장 △남미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도지회 부회장 △이봉찬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장 △최형규 도건설협회 사무처장 △원행 월정사 부주지 스님 △홍성구 강원대 교수 △김용은 춘천시 행정국장 △박완재 동해부시장 △김왕재 횡성부군수 △김관식 철원부군수 △김명선 도기획조정실장 △이주익 도문화관광체육국장 △최원식 도건설교통국장 △박흥용 도보건복지여성국장 △노재수 동계올림픽본부장 △최기호 도녹색국장 △전영하 도환경해본부장 △김보현 도기획관

농지익산한우 취급점
지산한우
▶원주축협(본점)/원주농협하·로마트단지, 중앙, 행구점/남원주농협중앙마트/이마트원주점/원주원예하·로마트/문파농협하·로마트동화점/롯데마트
▶우리소건현점(T. 747-4714),
▶교두래현점(T. 734-2211) / 주삼택(T. 766-8686)

원주~강릉 고속철 건설 비리 투성이

공사비 71억 과다 청구·입찰 담합 강원경찰청, 대형건설사 6곳 수사

속보=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 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참여한 국내 대형 건설사 4곳이 담합 비리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본지 4월 20일자 5면 등)을 받은 가운데 이들 건설사를 포함한 6곳이 공사비 과다청구 등 각종 비리로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번 사업 구간 중 국내 최장 산악터널인 대관령 터널 공사과정에서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 한양, 삼성물산 등 건설사 등 6곳의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과다 청구한 사실을 적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원청은 대관령 터널 공사과정에서 88억원 가량의 공사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로 6개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강원청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번 사건을 이첩받았으며 이후 제20대 총선 수사에 밀려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총선이 막을 내리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짓고 건설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 공구의 공사비를 각각 맡은 6개 건설사는 대관령터널 등을 굴착하면서 전자뇌관 수량을 100% 대비 40~79% 수준으로 적게 반입하는 방식으로 공사비 71억원 가량을 과다청구했다.

이 중 2공구 공사를 맡은 한진중공업은 설계 내역(100%) 대비 전자뇌관을 40.3%만 반입해 28억4000여만원의 가장 많은 차액을 남겨 공사비를 수령한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일부 공구에서는 공사기성금 11억원을 과다 청구하고, 지급할 필요가 없어진 특허사용료 6억원도 공사비에 차감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총사업비가 1조원에 이르는 이번 사업의 입찰 담합 비리 혐의를 포착, 지난 19일 국내 유명 건설사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건설사 4곳은 지난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고속철도 사업에 참여하면서 4개 공사 구간을 서로 나눠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석

‘적정공사비’ 확보로 분쟁 줄이는 입찰환경 조성돼야

공사원가분담금 갈등 해법은

공사원가 분담금을 둘러싼 건설사 간 갈등과 분쟁이 갈수록 꼬이고 영커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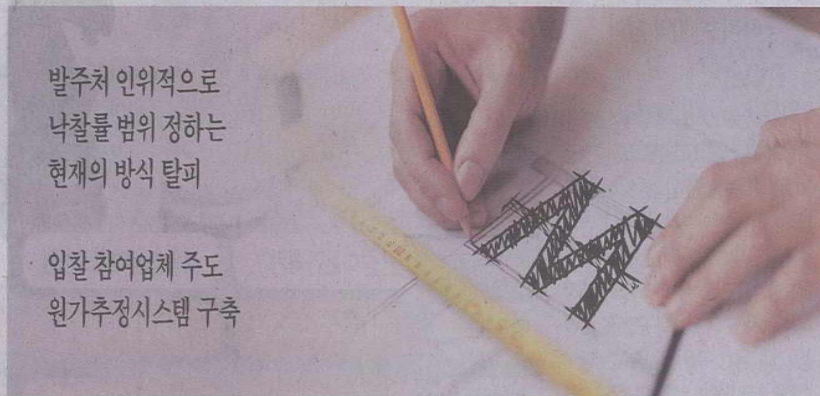
공동수급체 대표사들은 처사는 원가에 따라 쌓여가는 적자가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 더 이상 손실을 혼자 떠안을 수 없는 처지가 됐고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분담금 부담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사정이 더욱 심각한 것은 대표사와 구성원 모두 적자폭이 워낙 커 한 발씩 물러설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탓에 법정에서 시비비리를 가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손해배상 공사비부과세 청구, 설계보상비·약정금 반환, 부당이득, 하자 등에 대한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분담금 청구소송까지 더해지면서 건설사들은 주택과 해외사업에서 어렵사리 벌어들이

발주처 인위적으로
낙찰률 범위 정하는
현재의 방식 탈피

입찰 참여업체 주도
원가추정시스템 구축



돈으로 로펌들 배만 불러주고 있는 형국이다.

어제의 동지를 오늘의 적으로 내모는 공사원가 분담금 문제의 원인은 결국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제도에 있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지적이다. 저가낙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와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공사비 책정 등으로 인한 공공공사 악순환 구조의 한 축을 공사원가 분담금이 떠안고 있다.

그야말로 공공건설 시장이 겪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기성전-적정공사비’로 압축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전 같았으면 대표사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의 손실은 분담금 갈등 없이 넘어갔었다”면서 “그러나 손실을 보는 현상이 늘어나고 현장별 손실 폭도 커지면서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주지 않는 한 공사원가 분

담금 갈등은 접점을 찾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악한 현실로 인해 공사원가 분담금 문제가 불가피하다면 갈등과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원가추정 시스템 구축이 그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입찰제도도 발주기관이 인위적으로 낙찰률의 범위를 정하는 구조다. 최저낙찰률을 대신

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도 예외가 아니다.

발주기관이 이미 낙찰률의 범위를 설정하고 공동수급체를 관리·감독하는 발주기관의 역할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사원가 분담금을 놓고 공동수급체 내부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면 품질 저하, 공기 지연,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발주기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발주기관은 담당자 파견 등을 통해 공동도급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지, 결림돌이 있다면 결림돌을 서둘러 제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사원가 분담금 문제가 있어 가장 가까운 해결사는 법원도, 정부도 아닌 발주기관”이라며 “발주기관이 공사 수행 과정에서 구성원 간 입장을 유연하게 조정하면 법적 소송으로 가는 사태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